

오피니언

다산포럼

염재호



들과 패싸움을 벌이거나, 기껏해야 학교 안에서 주도권 다툼을 위해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일이 간혹 있었을 뿐이다. 친구들끼리 가까운 아이들은 있어도 편을 먹고 힘있는 다른 친구를 왕따 시키는 일은 없었다.

좁은 지역 안에 쥐들을 몰아넣고 살게 하면 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경쟁적이 되고 공격적이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우리 아이들의 폭력적 현상이나 집단 따돌림도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나 세계

식만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강하게 주입되었다.

소위 SKY 대학이라는 일류대학에 들어갈 확률은 3% 내외에 불과한데 나머지 97%의 아이들도 유치원부터 이를 목표로 경쟁하면서 자신들의 열등감만 키워나갔다. 삶의 다양한 가치를 가르쳐주기 보다는 오로지 대학입시에만 아이들을 내모는 2만불 시대의 서글픈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우리 아이들을 왕따와 자살로 내몰고 있다.

공해와 인스턴트식품으로 망가진 우리 몸이 조그만 자극도 마치 외부에서 침투한 병균으로 잘못 알고 공격한다. 자기 면역체계가 과민반응하는 아토피 병리현상처럼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더부러 살아야 하는 친구와 이웃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고 있다.

이제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부모들의 맹목적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우리도 핀란드처럼 중학교 졸업 때까지는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는 시험을 아예 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학교가 더 이상 아토피로 피 흘리는 병리현상은 막아야 한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을 선거에 '지방분권' 제도화 꼭 이뤄내야

총선·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 확대와 수도권권심 정책으로 일관해온 MB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각종 '지방살리기' 정책이 선거공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달 1일 여수에서 협의회를 갖고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총선, 더 나아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각 후보 캠프에 요구할 예정이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 내 지방분권위원회 설치와 '3할 자치' 해소, 자주재정권 확보 방안 등을 공약으로 개발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많은 정책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논의 한번 없이 폐기될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제도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는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도 31일 지방분권활성화 정책을 선거공약에 반영하도록 공동대응하자는 데 합의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틀림없다. 세계화시대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발전 모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역할 분담 없이는 글로벌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실상은 이런 기류를 거스르며, 중앙집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중앙정부의 권력 강화 등으로 지방분권이 이전 정부에 비해 후퇴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선거의 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을 정책의 반영, 해결하려고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요건임을 후보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도 지방분권 활성화 공약 여부를 따지는 등 지역발전의 이같은 인물을 뽑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위작 시비 '토요그림경매' 진위부터 가려라

지난 2006년부터 진도 윤림산방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는 '토요그림경매'는 미술인과 미술 애호가들에게 신선한 그림 장터로서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 그러나 사흘 전 열린 경매에서 남농(南農) 허건(許健·1907~1987) 선생의 '강변산수'라는 작품을 비롯한 40점의 위작 논란이 일면서 경매가 취소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겠지만 남도에순은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가 높은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치밀한 검증 과정 없이 경매를 진행해 미술시장과 감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은행은 해당 그림을 2010년 A옥션을 통해 180만 원에 구입했고, 해당 구입처의 인증서가 있어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위작 의혹의 소지가 없다면 경매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지 않는가.

남도에순은행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전업작가들의 작품을 사주고, 경매 등을 통해 시장에 유통시켜 지난 7년간 미술인의 저변 확대와 경매의 신뢰성을 높여온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경매를 통한 지원 방식으로 200여 명의 작가들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2천500여점, 지원액도 8억3천만 원에 달한다.

남도에순은행은 그동안의 성과를 거둬들이자 무엇보다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다시는 위작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완벽한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번엔 문제가 된 작품에 대해 고미술품 등에 감정을 의뢰, 진위 여부를 조속히 가려야 함은 물론이다.

만일, 위작으로 판명한다면 관계자들을 엄히 문책하고, 진품으로 확인되면 위작 시비를 부른 윤림산방 관계자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토요경매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더 이상의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고



김광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이를 근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하도 면세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해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업자가 많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면세사업자이다. 그러나,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영역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3년째 이상 소유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지난해부터 과세대상에 추가되었으므로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하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은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둘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멀리 떨어진 영세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현지접수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접수 일자, 접수 장소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셋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미제출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작년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1월 31일)이 사업장현황신고 기한(2월 10일)과 달라 혼란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극도의 자신감이 오히려 개인들에게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그들도 2만불 시대를 맞으면서 자신들의 성공신화 유산을 자신들에게 기대하고 아이들을 처열한 경쟁으로 내몰아서 1980년대 이찌메와 자살의 병리현상이 극심했던 것이다.

IMF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각인시키면서 극도의 경쟁의식을 심어주었다. 신자유주의 이념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심과 위기의

출기함과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이 일치되도록 범용성이 개조되었으므로 2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넷째, 의료업, 수입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해당 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되며 각 개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섯째,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 전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특히 사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검증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세미라포 센터(126번)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 지역 납세자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길 기대하며,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광주지방국세청 세무분석과장>

기고



임영일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도서관은 종래의 열람과 대본이라는 단순기능을 뛰어넘어 이제는 지역주민의 지식향상과 복지구현을 위한 지적 보고이자 정신향양과 정보자료의 요람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모든 지식정보콘텐츠를 수집하고 가공·축적 및 새로운 정보로 재생산하여 지식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물론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의 증진 등을 통하여 기본권의 신장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도서관 기

능의 변화에 맞추기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8만 명 수준의 도서관당 인구수를 OECD 선진국 수준인 인구 5만 명당 1개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능을 융합 중심의 다양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하고,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자 참여 등 도서관이 사회적 소용 창구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선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과 도서관 이용격차를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복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선 5기 문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도서관 확충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기업 1도서관 지원 메세나운동 벌이자

먼저, 공공도서관은 총 30개관 조성을 목표로 현재 시립도서관 3개관, 구립도서관 8개관, 교육청도서관 5개관 등 16개관이 관리 운영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문화복합시설과 디지털자료실 등을 갖춘 최첨단 도서관 14개관(시립 2, 구립 11, 교육청 1)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까지 정보서비스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서·남·북·광산구 지역에 구립도서관 4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질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광주시는 시내 전역에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눈을 돌려 이들을 네트워크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공도서관 분관으로 자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2년을 작은 도서관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 시내에 산

재해 있는 229개관의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인구 1만5000명당 1개관 수준인 97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거점도서관에는 시설개선과 자료구입을 위한 리모델링비와 운영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여 주민 이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원 확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적극 응모토록 유도하고, 광주시 자체적으로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활성화와 도서관기증 알리미 창구 설치·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후원회 구성 등을 통해 1기업 1도서관 지원 메세나 운동 전개와 범시민 도서관기증 붐 조성, 자원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2012년 핵심 키워드인 지식·정보의 소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감안,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활성화를 위한 메세나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어서 시민과 기업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광주시 문화수도예술과장>

자살자 유가족 치유 매뉴얼 서둘러 만들어야

성적을 비판하거나 부모의 꾸지람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같은 반 친구가 자살을 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청소년들은 가족 만큼 큰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며칠 전에는 승진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학교 교실에서 목을 매 자살한 여교사까지 있었다. 그동안 그 교사로부터 그 교실에서 배운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 매뉴얼이 없을까. 교직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럴 게 따랐더니 준비돼 있지 않다고 한다. 결국, 학교와 학부모는 해당학교 같은

반 친구들에게 '심장마비'라거나 '실족사'라고 돌려댄다는 것이다.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 영영 비밀로 지켜지면 다행이지만 결국에 친구의 죽음은 자살이라는 게 밝혀지면 같은 반 친구들의 충격과 놀라움은 너무나 크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작정 숨기다가 나중에 들로나 아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줄게 아니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주고, 그 대신 아이들의 충격을 줄일 '자살자 유가족, 친구, 지인 정신치료와 회복 훈련'을 해주는 게 낫다고 한다.

가까운 지인 중 아버지와 형이 모두 자살한 사람이 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인 지인도 수많은 자살충동에 시달렸고, 결국 음독 자살을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다른 사

람이 빨리 발견해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 지인은 우울증과 함께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 버렸다.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치유는 심리상담과 비슷한 처지의 유가족끼리 모여 마음을 털어놓는 자조 모임만 마련해줘도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관심과 치료와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현재 국내 유가족들은 마음을 털어놓을 기관은 서울, 인천, 경기도 3곳밖에 없다고 한다. 그들을 돌볼 기관이 어떻게 부족하니 자살자가 발생한 초기에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회복을 도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회복 지원이 있어야만 이들이 상처를 씻고 세상 밖으로 나와 줄 수 있으므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인 치료 확대가 절실하다.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곡동

無 等 鼓

'이스트먼 코닥'은 현대인들의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브랜드다. 131년 전통 필름을 업체로 출발한 코닥은 세계사현장은 물론, 인생을 기록한 생활의 동반자였다.

1880년대에 롤필름과 조작하기 쉬운 카메라를 만들어 선종적 인기를 끌었던 코닥은 사진업계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성을 구축했다. 컬러필름의 대명사 '코닥코롬'은 노래로까지 만들어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한마디로 코닥의 발자취는 필름업계의 역사였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한 것도 1975년 코닥이었다. 당시 획기적인 기술의 선두주자였던 코닥은 1976년 미국 필름시장을 90%, 카메라시장 85%를 점유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코닥은 디지털 기술의 장래성을 정확히 내다보지 못했다. 코닥은 디지털카메라가 되레 자사의 주력 제품인 필름의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릴까봐 우려하며 주춤했다. 이 틈을 타 뒤늦게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시대의 변화는 읽었으나, 과감하게 앞길을 헤쳐가지 못한 결과였다.

디지털카메라의 개척자인 코닥이 디지털시대에 도산 위기에 이른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재도약할 기회를 선점했지만, 필름시장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머뭇거리다 불려온 자승자박이다.

생사기묘에 놓인 코닥에서 얻는 교훈은 간단하다. 살아남으려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하나에만 매달리라는 것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